

‘클린 혁명’ 부패 없는 대한민국 시험대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 4만919개 기관·400여만명 대상

한국 사회 전반 대변화 예고 ... 모호한 규정에 초기 혼선 클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련기사 2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16일 처음 법안을 발표할 지 4년1개월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법안처리를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논란도 많았지만, 분명한 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부패없는 대한민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명에 달해 김영

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행 초기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법 시행에 따라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집단문화를 근본부터 바꿔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직접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새로운 풍경이 연출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통이 단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8일 이후에는 약속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청탁이나 과도한 접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이

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왔다”면서 “질기고 집질 부패를 근절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소 아박해 보일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정성을 표할 수 있다”며 “이러나 청렴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이미 정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초부터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를 구성한 감사원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처리 전담 조직체계를 완비했다.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협뉴스

광주시·전남도 인사청문회 도입했지만...

기관장 후보자 선정, 해당기관 이사회·상위기관이 좌우 심사과정에도 ‘입김’ ‘외압’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이후 도입한 인사청문회 사전절차인 후보자 선정이 해당 기관 이사회나 상위기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지만, 각 기관이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입김’이나 ‘외압’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28일 오전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들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한 후보자들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낙연 전남지사가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 추천 이사 2명, 도지사 추천 2명, 도의장 추천 3명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거르는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객관적인 기준도 갖추지 못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여 명에 이르는 지원자를 단기간에 후보자 2명으로 압축하면서 해당 기관 이사회와 상위기관의 입김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모에 참여한 지원자는 “이사회, 전남도,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은 당연히 추천해준 곳의 이해

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어디의 입김이 강하냐에 의해 후보자가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1차 공모에서 신보 이사가 지원, 같은 재단 이사가 참여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보는 특히 1차 공모에서 9명, 2차 공모에서 14명이 지원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3차 공모까지 하는 등 후보자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들 공공기관장 후보자가 지역에서 활동해 알려진 인사보다는 수도권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지역 출신 인사가 선정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역량 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광대서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고향만 신안일뿐 송실대를 나와 CJ제일제당에서 25년 동안 사회공헌팀과 CJ나눔재단&CJ문화재단을 총괄 운영한 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소장을 지냈다. 최형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역시 전남대를 졸업한 뒤 28년간 제일화재에서 근무했을 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철도노조 파업

화물열차 70% 멈춰

KTX는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7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의료·보건 등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한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도 이날 광주송정역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의 이면에는 위험의 외주화,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 측이 필수운영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들어가면서 파업 첫날인 이날은 여객수송과 화물운송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KTX는 정상 운행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시(일 338회) 대비 64% 수준인 218회, 화물 열차의 경우 평시(일 248회) 대비 30% 수준인 76편이 운행됐다. 호남지역의 경우 48개 물류철도 노선 가운데 18개 노선만 운행 중이나 파업 전 운송사와 화주 등이 3일치 물량을 미리 수송해 물류 차질은 빚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코레일 전남본부는 전했다. 하지만 파업이 지속하면 기관사 등 근로자 피로가 누적돼 운행 노선, 편수 등이 감축되는 등 물류 이송에 불만이 예상된다. 이성계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장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단체교섭·단체행동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자 권익을 지키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송정역 1500여명 출정식 27일 광주 송정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건강보험노조 광주전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바다에 앉아 연대단체 대표자의 지지 연설을 들으며 파업 결의를 다지고 있다. 1500여명의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철도의 경우 위험 외주화, 의료는 과잉진료 등을 불러와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검찰, 광주시청 전방위 입수수색 ▶6면
뮤지컬 ‘빨래’ 내달 1·2일 공연 ▶16면
KIA ‘꼬꼬마 카스톤’ 재결합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영남 우대·호남 홀대

해양수산 연구기관 16개 중 영남 12개

경기·충청·호남에 4개 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수산 자원 핵심 연구기관 16개 중 12개가 남동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과 경남북 해안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을 비롯한 9개 기관이 몰려있지만, 경기도와 충남·북, 전남·북 등 서남해 주당 이계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

소방정 이상 공무원 44%가 영남 출신

충청 21%·호남출신 18% 남 출신이었다. 그 외 충청 출신이 13명(21%), 호남 출신 11명(17.7%), 경인·강원 출신 10명(16.1%), 제주 출신 1명(1.6%) 순이다. 계급별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영남 편중이 더욱 심했다. 소방총감·소방정감 5명 중에서 4명이 영남 출신이고, 1명만 충청 출신이었다. 또 소방감은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영남 출신이고, 충청 출신 3명, 경인·강원 출신 2명, 호남 출신이 1명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측 상단 상태표시줄과 Always On Display에 있는 그린 배터리를 아이콘을 확인하세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갤럭시 노트7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갤럭시 노트7의 일반판매를 재개합니다. 아직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갤럭시 노트7으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일 안에 제품 교환을 마무리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삼성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일동